

북·중 경제협력 활성화와 그 파급효과

이금휘(중국 연변대학교)

논문 요약

남·북 경제협력은 2007년을 기점으로 줄고 있지만, 북·중 경제협력은 오히려 활성화 양상을 보여준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2010년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착공처럼 ‘공동 개발, 공동관리’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이 왜 다른 국가들과 같등 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강화시키고자 하며, 북·중 경협이 동북아 지역구도와 한·중 협력에 끼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복잡계 이론’을 이론적 배경, 분석틀로 삼아서, 동북아 지역구도 내부의 상호작용하는 각 국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에게 북·중 경협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위협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중 협력은 ‘1+1=2’가 아닌 ‘1+1>2’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주제어 : 북·중 경협, 남·북 경협, 한·중 협력, 동북아 지역구도, 중·미 관계

I. 서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¹⁾ 대외무역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급증하여 2011년 현재 63.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가운데 북·중 교역은 56.3억 달러로 89.1%를 차지한다. 북·중 경협은 2010년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착공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동개발, 공동관리’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고, 협력의 주체도 ‘정부 인도(政府引導)’에서 ‘정부 주도(政府主導)’로 바뀌고 있다. 새로운 단계의 북·중 경제협력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같등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오히려 활성화시키고자 할까? 북한 역시 ‘중국에의 종속’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과의 경협에 적극적인가? 서로 연관된 이 질문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북·중 관계는 동북아 지역구도 속에서 맺어졌다. 북·중 경협 활성화 역시 동북아 지역정세와 그 갈등구조 속에서 이뤄진다. 지금까지 동북아 지역구도와 관련한 연구들은 중미 관계를 핵심변수로 설정하고, 이 거시적 패턴 아래에서 진행했다. 예컨대 한국 학계의 연구들은 북·중 경협 활성화에 대해 한·미 동맹의 강화 여부와 연결 지으며, 중미 대결구도 → ‘남·북방 삼각구도’로 귀결하였고, 결국 중미 관계라는 커다란 축척(scale)에 묶여 버렸다. 현재 동북아 지역구도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요소환원주의에 근거한 ‘1+1=2’식으로 접근하면 놓치는 것이 많을 수 있다. 상호작용하는 요소들 사이의 동태적인 ‘되먹임 고리’가 형성되므로, ‘1+1>2’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과연 동북아 지역구도의 핵심변수를 어떤 국가로 잡아야 할까?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왜 보유하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과시할 때에는 바로 상실된다고 말할까?²⁾ 이 점이 본 논문의 두 번째 문제의식이다.

1) 본 논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으로 약칭한다.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언급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한국’ 혹은 ‘남’, 북한은 ‘북’으로 서술하였다.

2) 이회욱, “북·중 경제협력 강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정책포럼 제18차 국제세미나 토론회』

본 논문의 III장에서는 동북아 지역구도를 복잡계로, 그 구성요소로는 동북아 각국 지도부 및 그 대응으로 정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이 복잡계에 북·중 경험 활성화라는 섭동(攝動)요인이 가해짐으로써 한국의 인식에 따른 동북아 각국 지도부의 반응, 즉 파급효과를 되먹임 시스템 원리를 응용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s Theory) 및 그 분석도구를 이론적 배경, 분석틀로 하였다.

‘복잡계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되먹임’이란 피드백(Feedback)을 한국어로 번역한 말이다. 자신의 행위가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거쳐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뜻한다.³⁾ ‘되먹임 고리’(피드백 루프: Feedback Loop)란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뤄지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거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⁴⁾ 상호작용하는 요소간 인과관계에는 양과 음의 인과관계가 있다. 어떤 변화가 되먹임 고리를 따라 자기 자신에게 양의 영향으로 되돌아오면 ‘양 되먹임 고리’(자기강화고리), 음의 영향으로 되돌아오면 ‘음 되먹임 고리’(자기균형고리)가 된다. 시스템에는 양 되먹임 고리와 음 되먹임 고리가 동시에 존재하고, 또 상호 작용하면서 교대로 시스템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지배하는 되먹임 고리가 바뀌는 현상을 ‘지배적 되먹임 고리의 전환’이라고 한다.⁵⁾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는 시스템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현실적으로 묘사하여 성장이나 변화패턴을 추정하며, 미세한 변화로 거시적인 변화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략적 지렛대(Leverage)를 직관적으로 발견하는 데 응용한다. ‘복잡계’에서는 수많은 구

북한정책포럼, 2011년 4월 12일.

3) 김동환, 『시스템 사고-시스템으로 사고하기』, 서울: 선학사, 2004, p.126.

4) 윤영수·채승병,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p.59.

5) 김동환, 앞의 책, pp.148~157; 윤영수·채승병, 앞의 책, p.59, p.330; 존 브리그스데이비드 피트, 김광태·조혁 옮김, 『혼돈의 과학』, 서울: 범양사, 1990, pp.23~26.

성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각기 개별적 특성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현상과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새 질서의 출현을 ‘창발(Emergence)’이라고 부르며, 창발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과정’이라고 한다. 복잡계의 창발현상 중 특징적인 것이 ‘임계현상’이다. ‘임계현상’이란 특정한 임계점(Critical Point)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무질서한 상태였다가, 임계점에 접근하면 구성요소들이 규칙을 갖고 모여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혼돈의 양상을 보이는 시스템에 ‘섭동’이 가해져 ‘요동’이 일어나면, 시스템은 ‘임계점’을 전후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창발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복잡계 이론을 동북아 지역구도 연구에 응용할 수 있다면, 그 내부에서 진행되는 북·중 경협 설명과 그 파급효과 예측도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잡계 내의 ‘되먹임 관계’는 시스템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핵심이다. 따라서 ‘되먹임 고리’의 ‘극성’에 의해 전체 시스템이 형성되는 ‘양과 음 되먹임 효과’를 동북아 지역구도에 응용하여 정리해 볼 것이다. 나아가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는 동북아 각국 사이에서 어떤 특정국가의 미세한 변화가 동북아 지역구도라는 거시적 패턴의 큰 변화를 가져올 ‘전략적 지렛대’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크게 두 부분이다. 먼저 북·중 경협 활성화와 그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정리하고, 이어서 북·중 경협이 동북아 지역구도와 한·중 협력에 끼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을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II. 북·중 경협 활성화의 배경과 특징

1. 북·중 경협 활성화의 배경

북한과 중국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정치·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북·중 정상회담은 2012년까지 총 46회 이뤄졌다.⁶⁾ 특히 2010년 5월~2011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이어진 북·중 정상회담은 “대를 이은 중·조 친선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당시 중국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이 나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환대하였다.⁷⁾ 중국의 이런 예우는 다른 국가 지도자의 방중 경우에 전례가 거의 없다.

현재 북·중 관계는 중국의 대외관계에서⁸⁾ 제일 높은 레벨이다.⁹⁾ 북·중 공산주의자들의 연계는 1930년대부터 깊어졌다.¹⁰⁾ 1961년 7월 11일에 맺은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에 의해 ‘형제당 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한 단계 떨어졌지만, 양국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호관계’에도 기복은 있었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북러 무역을 대신하여 북·중 교역이 1위로 올라섰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사회주의 우호가격제와 구상무역을 없애고 경화 결제를 요구하였다. 교역 주체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경하였다.¹¹⁾ 게다가 1992년 한·중 수교로 북·중 관계는 얼어붙

6) 2011년까지의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통계수치는 주로 이종석, 『북한-중국관계(1945~2000)』, 서울: 중심, 2000, pp.309~312와 이동률, “중국의 대북전략과 북중관계.” 『세계지역연구논총』, 29집 3호, 2011, p.309를 참조하였음.

7) 鳳凰網(ifeng.com) 2010년 5월 8일 뉴스보도; 중국 CCTV13 뉴스보도 2011년 5월 25일.

8) 중국의 대외관계는 낮은 레벨에서 높은 레벨로 수교관계, 선린 우호관계, 동반자 관계, 전통적 우호관계, 혈맹관계로 구분 가능하다. 이 가운데 동반자 관계는 비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전략적 동반자로 나뉜다. 비전략적 동반자관계에는 협력적 동반자관계, 건설적 협력 동반자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있다. 전략적 동반자관계에는 전략적 동반자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있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7조를 보면 “본 조약은 수정 또는 폐기할 데 대한 쌍방 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즉 북·중 관계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북·중 경험은 동 조약 제5조 “... (중략)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서 호상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며 양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의 반영이기도 하다.

10)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서울: 선인, 2003, pp.513~529.

11) 이영훈,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제246호, 2006, pp.3~4.

었다. 1995년,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유엔에 식량 지원을 신청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원조 개시와 함께 1996년 중국도 대북원조를 재개하고, 폐지했던 우호가격제를 부활시켰다. 1996년 5월, 북한 홍성남 총리의 방중에 맞춰 5년간 대북원조 내용을 담은 <중·조 경제기술협정>을 체결하였다. 1999년,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¹²⁾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장쩌민의 방북으로 양국 관계는 보다 좋아졌다. 북한은 200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으로 5천만 달러 상당의 경제지원을 얻어냈다. 2005년과 2006년의 정상간 상호 교환방문 때에는 사실상의 지원 성격을 지닌 중국의 대북투자과 무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5년 후진타오의 방북시에는 5년간 20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2006년, 2009년 북한의 연이은 두 차례 핵실험으로 양국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¹³⁾ 2009년 10월 수교 60주년 행사에 맞춰 이뤄진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을 통해 '약간의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다. 여기에 '측매역할'을 한 사건이 2010년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었다. 두 사건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한·미 동맹 강화라는 상황을 만들었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 심화로 이어지면서 북·중 양국 간의 관계를 역설적으로 강화시켜 주었다. 그 결과가 북중 정상외교의 2010~2011년 세 차례 정상회담이었고, 곧바로 양국 접경지역 개발로 이어졌다. 북·중 경협에서도 제일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나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공동개발이다.

12) 이영훈, 권영경은 이 시기를 '전략적 협력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영훈, 앞의 논문, 2006년, pp.3~4; 권영경, 앞의 논문, pp.165~167.; 이동률은 1999년 북한 김영남의 방중을 한·중 수교 후, 첫 최고위급 회담으로 북중 관계 회복이라고 주장한다. 이동률, 앞의 논문, p.303.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표현하면 마치 동반자 관계에서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의미할 수 있다. 게다가 여러 연구들을 보면 양국관계를 '혈맹관계', '특수관계'라고 할 뿐 명확한 규명이 없다. 필자는 이 시기에 '전통적 우호관계' 속에서의 '삐걱임'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본다. 아울러 이 시기를 경제 활성화의 시작점이라고 본다.

13) 2006년, 2009년 2차례의 북한 핵실험 후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북한도 중국의 태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2년 8월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이후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¹⁴⁾

중국과 북한 사이의 접경지역 공동개발 현황은 <표 1>과 같다.¹⁵⁾

<표 1> 북·중 접경지역 개발 현황

	중국	북한
개발 의도	동북3성 경제 개발	접경지 경제특구 개발, 외자 유치
집중 개발	접경지 인프라 개발	경제특구 활성화
압록강 지역	요녕연해경제발전계획(2009. 7)	신의주특별행정구(2002. 9)
	황금평경제지대 -신압록강대교 건설 추진(2010. 12. 31 착공→2014.7 개통 예정) -압록강 유역발전소 건설사업 추진(2010. 3. 31 착공)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발(2011. 6. 8 착공) -북·중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황금평경제특구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2012.9.15) -평양국제공항 건설(대상 규모 1200만 수용량/년; 대상투자 12억 달러) -남포IT산업단지(개발면적 30평방키로미터) -농업기지 건설(총투자규모 15억 달러) -단동의 전기, 통신, 용수 등 기초시설 연결 계획 -수해방지 대책으로 홍수방어벽 건설 계획 ※ 북한의 개발구상: 황금평을 축으로 서해안 경제벨트(황금평·위화도→신의주→평양→남포→해주)	
두만강 지역	창지투개발계획(2009. 8)	나선자유경제무역역지대(1991. 12)
	나선경제무역역지대 -나진항 개보수 및 독점사용권(2009. 10 합의)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2010. 1. 4) -두만강대교 보수공사(1차: 훈춘~원정리 2010. 6. 1 완료) -나선경제무역역지대 북·중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착공식(2011.6.9) -<나선자유경제무역역지대법> 개정(2010. 1. 27 / 2011. 12)	

14) 염규현, “황금평~라선 동서 양축 기반 동해·서해 경제특구 부상한다.” 『민족 21』 통권 139호, 2012, p.34~36.

15) 유병규 외, “북중접경지역 개발 현황과 파급효과.” 『경제주평』 442호, 현대경제연구원, 2011, p.3; 김병승,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개발 전망.” 『통일문제연구』 통권 55호, 2011, pp.4~5; 김일환, “북한의 대외경제에 대한 인식과 북중경협.” 『글로벌정치연구』 제4권 1호, 2011, p.20; 염규현, “황금평-라선 동서 양축 기반 동해·서해 경제특구 부상한다.” 『민족 21』 통권 139호, 2012, pp.37~39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p>-원정리~나진항 도로 개건(2차 공사: 2012. 8 준공)</p> <p>-고효율농업시범구 건설</p> <p>-5개 통로 구축 : 통로1 훈춘~원정리~나진항 연결도로(2012. 9 개통) 통로2 회령~싼허 다리 보수(2012. 8 완료) 통로3 두먼~청진항 철도 현대화 통로4 두먼~홍성리 연결 철도 복선화 통로5 두먼~나진 철도 현대화</p> <p>-항만 : 나진항 1호부두(중국 10년 사용권); 4·5·6호부두(중국 50년 사용권) ; 청진항 3·4호부두(중국 15년 사용권); 단천항 개발 합의</p> <p>-청진중공업지구(개발면적 50평방킬로미터, 총 투자규모 180억~200억 달러)</p> <p>-김책광업제련단지(부지면적 50평방킬로미터, 총 투자 80억 달러)</p> <p>-원산·금강산(관광, 여행)</p> <p>※ 북한의 개발구상 : 나선을 축으로 동해안 경제벨트(청진→김책→원산·금강산)</p>

<표 1>은 중국과 북한이 북핵문제 등에서 ‘노골적인 반감’을 상호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부분에서 급성장을 지속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북한과 중국의 ‘유무상통(有無相通)’ 현상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의 학계에서는 중국이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시켜 접근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2004년 4월 19일 후진타오 체제 출범 이후 북·중 관계가 ‘실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전했다고 평가한다.¹⁶⁾ 중국은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이원적으로 접근하면서 새로운 북·중 관계의 틀을 구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 7월 공산당 외사영도소조(조장 후진타오), 재외공관장 회의 등을 거치면서 구체화됐을 것이다. 그 결과 “피로 맺은 (양국)관계”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고, 북·중 경험도 “중국 당·정의 확고부동한 방침”으로 활성화됐다.¹⁷⁾

2. 북·중 경험 활성화의 특징

16) 문홍호,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의 대 북한 인식과 정책: 변화와 지속.”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9, pp.186~187, p.197 ; 이회옥, “북·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1』,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194, p.211.
 17) 이회옥, “김정일 방중, 중국 그리고 6자회담.” 『한반도 포커스』 제7호, 2010.

최근 북·중 경협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북·중 교역의 급상승과 수출입 상품의 다양화 둘째, 중국의 대북 투자규모 확대 셋째, 북·중 경협 방식의 업그레이드 넷째, 북·중 접경지역 관광업 활성화 다섯째, 산업경제 관련 인재 양성 및 인력 교류 활성화 등이다.

(1) 북·중 교역의 급상승과 수출입 상품의 다양화

1990년대 후반까지 북·중 교역 규모는 3.7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0년 4.8억 달러, 2001년에는 7.3억 달러로 늘기 시작하여 2011년에 이르러 56.3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연평균 97%씩 급격하게 성장한 것이다. 남·북 교역을 제외할 경우 북·중 교역액이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56.7%, 2007년 67.2%, 2008년 73.2%, 2009년 78.5%를 거쳐 2011년 현재 89.1%이다.¹⁸⁾

<표 2>는 북·중 교역 규모 및 대 중국 무역 의존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¹⁹⁾

<표 2> 북·중 교역 규모 및 대 중국 무역 의존도 변화 (단위: 억 달러)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북한 무역총액	14.80	19.69	22.70	22.60	23.91	28.57	30.02	29.96	29.41	38.16	34.14	41.74	63.2
북중 무역총액	3.7	4.8	7.3	7.3	10.2	13.7	15.8	16.7	19.7 ↑	27.8	26.8 ↓	34.6	56.3
대중수출	0.5	0.3	1.6	2.7	4	5.9	5	4.6	5.8	7.5	7.9	11.8	24.5
대중수입	3.2	4.5	5.7	4.6	6.2	7.9	10.8	12.3	13.9	20.3	18.8	22.7	31.6
무역수지	-2.8	-4.2	-4.1	-1.9	-2.2	-2	-5.8	-7.6	-8.1	-12.8	-10.9	-10.9	-7.1

*북한 무역총액에서 남북경협 금액은 제외된 것임.

18) 코트라, “2011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2012년 6월 발표.

19) 무역협회,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판; 코트라, “2011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권영경, “신 북중경협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과제.” 『평화학연구』 제13권 1호, 2012, p.153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표 2>를 보면 2006년, 2009년 북한의 핵실험, ‘광명성’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교역이 상승세를 보인 점이 주목을 끈다. 2008년~2009년 북·중 교역이 1% 하락한 원인은 북한 무역총액의 감소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 북한의 무역수지는 계속 마이너스였다. 그럼에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계속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사회주의 우호가격’에 의한 교역 및 구상무역²⁰⁾ 그리고 ‘변경호시무역(邊境互市貿易)’의 존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²¹⁾ 이를 감안하면서 <표 1>를 보면 2011년 대 중국 수출은 24.5억 달러, 대 중국 수입은 31.6억 달러이다. 여기에 우호가격제를 적용하여 수입의 20%인 6.32억 달러를 현물로 지불한다면 무역수지는 -0.78억 달러로 된다. 이 수치에 원 가격보다 낮은 원유 수입총액과 파악되지 않는 변경호시무역 총액 등까지 합하면 무역수지는 플러스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의 대 중국 수출상품을 보면 2004년경까지만 해도 농수산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2005년경부터 철광석, 무연탄, 석회석 등 광물자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7년부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15~20%를 차지한 비철금속 제품까지 합하면, 2007년 이후 북한의 대 중국 수출 품목은 70% 이상이 천연광물자원이다.²²⁾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식량, 원자재 등 소위 전략물자였다. 하지만 2008년부터 수입상품에서 기계·전자, 의류, 건설차량, 수송기기, 공장설비, 위탁가공용 섬유, 화학·플라스틱 등 제품이 늘고 있다.²³⁾ 북·중 교역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20) 변경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대체로 대북 수출대금의 80%는 경화로 지급받지만, 나머지 20%는 현물로 지급받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북 수출품목 중 매년 25%~30%를 차지하는 원유 가격은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다. 권영경, 위의 논문, p.153.

21) 이영훈,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제246호,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6, pp.23~24.

22) 권영경, 위의 논문, p.154.; 이영훈, 위의 논문, 2006년, p.9.

23) 이재호, “북-중경협이 남북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신 북중 경협시대의 한국의 대북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집』, 대외정책연구원, 2010, pp.45~47.

(2) 중국의 대북 투자 규모 확대

중국은 북한의 최대투자자국으로 2002년 15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08년 4천 1백만 달러, 2009년 4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하였다.²⁴⁾ 투자 주체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하고, 투자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북·중 교역의 활성화와 함께 중국의 대북 투자 규모도 확대 추세인 것이다.

2010년 12월,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황금평과 나선특구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중국은 5년간 3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투자 주체도 2002년 이전의 중소형 기업으로부터 대형 국유, 민영기업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에 투자한 대표적 중국 기업은 통화강철그룹, 오광그룹, 원허그룹, 당산강철그룹, 중강그룹 등이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동북 3성 개발과 연계된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지역 발전을 강조하는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1~2015년)>에서 처음으로 ‘지역 개방구조 구상’ 및 접경지역 경제협력을 관련시킨 만큼,²⁵⁾ 향후 대북투자를 더욱 늘려갈 것이다.

(3) 북·중 경협 방식의 업그레이드

최근, 북·중 경협방식은 일반교역을 넘어 산업 협력 및 접경지역 ‘공동관리, 공동개발’²⁶⁾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협력 주체도 지방에서 중앙으로 바뀌고 있으며,²⁷⁾ 양국의 경제발전 의도와 상호이익이²⁸⁾ 맞물리면서 국가발

24) 권영경, 위의 논문, p.158; 이영훈, 위의 논문, 2012, p.158.

25) 「중화인민공화국 제12차 5개년경제계획 요강」, 중화인민공화국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2011년 3월 14일); 1979년부터 중국의 「정부사업보고」를 검토해 보면 ‘접경지역 경제협력’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滿海峰, “新時期中朝關係定位與中朝邊境地區經濟合作發展.” 『遼東學院學報(중국)』 제13권 6기, 2011, p.123.

26) 2011년 6월 8일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공동개발 착공식에서 제기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요강」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중국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황금평에 상업센터와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 농업, 가공업 등 4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한다.

27) 양국의 협력 원칙은 ‘정부 인도, 기업 참여, 시장 원칙’의 12자 방침에서 2010년 8월, 김정일 방중 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정부 주도, 기업 위주, 시장 원칙, 호혜 공영’의 16자 방침으로 바뀌었다.

28)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해 경제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중국은 국내 경제발전의 불균형구조 타개를 위해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중국은 2011년 1월 처음으로 훈춘에서

전 전략차원으로²⁹⁾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였다. 즉, 큰 틀의 경제협력문제들은 양국의 중앙정부 기구 간에 협의하고, 이를 지방정부 간 협력, 개별기업의 대북투자 장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³⁰⁾

(4) 북·중 접경지역 관광업의 활성화

북·중 접경지역 물류중계 수송업의 발전과 더불어 북·중 접경지역 관광업도 중국 길림성 관광업의 한 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코스는 장춘-훈춘-나진 자가용관광, 나진-청진-칠보산 관광, 나진-금강산 관광, 그리고 북·중·러 3국관광(훈춘-나선-하산) 등이다.³¹⁾ 북한은 2011년 4월부터 훈춘을 출발하여,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둘러보는 '3국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2년 5월 28일에는 금강산관광 지역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별금강식당' 개업식도 열렸다.³²⁾

(5) 산업경제 관련 인재 양성 및 인력 교류 활성화

북·중 경험 활성화에 따라 양국은 관련 인재 및 인력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중국의 동북지역에 북한 유학생이 최소 200명 정도로 급증하여 지난

캐년 석탄 1만 7천t을 북한 나진항에서 상하이로 운송하였다.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가 2012년 8월 준공하면, 연간 100만t의 석탄을 남방으로 운송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철도 수송에 비해 연간 6천만 위안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신문화보』 2011년 1월 16일.

29) 중국은 경제발전의 불균형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에 제기되었지만 부진했던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을 2009년 '창지두 개발개발선도구 개발계획'이라는 중앙정부 프로젝트로 격상시켰다. 김강일, "북-중경협이 남북정치-안보관계에 미치는 영향." 『신 북-중 경협시대의 한국의 대북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집』, 대외정책연구원, 2010년 6월 28일, pp.30~31. 이것이 북한에서 1990년대 초부터 구상했던 신의주, 나선시대 경제특구 활성화계획과 맞아 떨어지면서 양국 간의 국경시대 개발계획으로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유병규 외, "북중접경지역 개발 현황과 파급효과." 『경제주평』 442호, 현대경제연구원, 2011, p.3; 김병승, "창지두 선도구'와 나선특구 개발 전망." 『통일문제연구』 통권 55호, 2011, pp.4~5; 김일한, "북한의 대외경제에 대한 인식과 북중경협." 『글로벌정치연구』 제4권 1호, 2011, p.20. 중국의 접경지역협력에 관련한 전문적인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2차 5개년경제계획 요강」에서부터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滿海峰, 앞의 논문, p.123.

30) 이미 나선, 황금평 경제특구의 공동개발협력체계를 북·중 간 공동지도위원회→공동개발관리위원회→투자개발공사라는 3단계 제도로 구성하였다.

31) 『연변일보』 2012년 5월 4일.

32) 『KBS뉴스』 2012년 6월 19일.

해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보도도 있다.³³⁾ 이는 2005년 10월 중국 원자바오 총리 방북 이후 경제분야 합의의 후속조치일 것이다. 당시 그 내용에는 “북한의 우수한 인재들의 중국 유학 등을 보장하는”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³⁴⁾ 또한 수십 년 이래 북한은 중국정부에서 제공하는 유학생 할당을 제일 많이 확보한 국가이기도 하다.³⁵⁾ 그리고 2012년 9월 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북한 인력은 지난 5월 중국에 처음으로 공식 수입 뒤 세 차례 더 들어와 투먼과 훈춘시의 7개 지역에서 모두 3백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북한 고급 IT 인력 29명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³⁶⁾. 이러한 상황은 2012년 8월 14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방중 이후 더욱 늘고 있다.

III. 북·중 경협 활성화가 동북아 지역구도에 미치는 영향

1. 북·중 경협 활성화에 대한 한국의 인식

북·중 경협 활성화는 현재 양국 국가발전 전략계획과 맞아 떨어지면서 경제적 추동력을 확보하였다. 북·중 경협은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와 다르게, 남북 사이의 경협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학자들은 2010년 ‘5·24 조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가 초래한 결과라는 데서 공감을 이루고 있다. 북·중 교역 급증, 특히 2010년 전년 대비 무려 46.9%나 증가한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은 남북경협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던 의류 위탁가공

33) 『데일리NK』 2010년 9월 10일.

34) 윤지훈, “북중 경협의 상징 압록강·두만강 개발프로젝트 황금평과 라진항, 동북아 경제지도 바꾼다.” 『민족 21』 통권 제104호, 2009, p.69.

35) 李俊江·范碩, “中朝經貿關係發展現狀與前景展望.” 『東北亞論壇(중국)』 통권 제100호, 2012, P.19.

36) 중국 정부가 일단 2만 명의 북한 사람에게 취업 비자를 주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다. 『경향신문』 2012년 5월 27일.

분야에서 거의 완벽하게 북·중 교역으로 대체된 결과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가공업체들은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³⁷⁾

북·중 경협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의 위축을 가져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 사회에는 두 가지 인식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부정적 견해는 북·중 경협 활성화가 중장기적으로부터 볼 때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도 나쁠 것으로 본다. 즉 북·중 경협 활성화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주도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다. 게다가 자원 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고 있는 북·중 경협 활성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자원을 선점케 하여 통일 후 한국이 통일 경제를 구축하는데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현재 북·중 접경지역 공동개발 형태로 가는 북·중 경협은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시킴으로써 향후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살리는데도 장애라고 주장한다.³⁸⁾ 이러한 우려는 ‘북한경제의 대 중국 종속론’, 심지어 ‘북한의 동북 4성론’, ‘식민지론’ 등을 확대 재생산 한다.³⁹⁾

긍정적 견해는 북·중 교역과 중국의 대북 투자로 인해 북한 주민의 물자 부족 해소, 소득 증대, 북한경제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다. 더불어 북·중 교역이 확대되면, 북한 시장도 활성화되므로 남·북 경협이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북 투자, 특히 접경지역 인프라 건설 등은 남북경제 통합과정에서 재원이 제일 많이 소요될 인프라 개발을 사전에 시행하는 것이므로, 한반도 통일비용의 절감효과를 줄 수 있다고까지 주장한다.⁴⁰⁾ 이러한 견해는 ‘동반성장론’, ‘북한개방촉진론’, ‘남북경협과 북중경협의 상호보완론’ 등을 포함한다.

필자는 북·중 경협 활성화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37) 양문수, “북중 경협 확대와 통중 봉남의 미래.” 『황해문화』 가을호, 2011, p.240.

38) 양문수, 위의 논문, pp.246~247; 권영경, 위의 논문, p.168.

39) 최명해, “북한의 대중의존’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평가.” 『주요 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10.

40) 양문수, 위의 논문, p.246, p.248; 권영경, 위의 논문, pp.167~168.

다. 기존 연구를 보면 동북아 지역구도의 ‘복합성’에 기인해 한국의 인식을 한·미 동맹 강화 여부에만 주로 연결시켰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면서부터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하였다.⁴¹⁾ 그 결과 최종적으로 중·미 사이의 대결구도로 귀결시킴으로써 동북아 각국과 상호작용 하는 한국의 ‘미세한 변화’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 검토까지를 처음부터 차단하였다.

‘미세한 변화’의 주체가 한국이 될수 있을까? 이 ‘미세한 변화’는 동북아 지역구도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까? 아울러 중국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특히 대 북한 문제에서 소위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수행에 또 어떻게 작용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복잡계 이론’에 입각하여 아래의 제2절부터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복잡계로서의 동북아 지역구도와 섭동요인

20세기 국제질서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였다. 그런데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미국 일방주의체제를 거쳐, 현재는 중국의 부상으로 힘의 분포가 분산되면서 ‘다극체제’로 수렴 중이다. 중국은 ‘G2’로 불릴 만큼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가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이 같은 구조 변화에 따라서 동북아 지역구도에서도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한 요동이 진행 중이다.

동북아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중국의 역할이 빠르게 커지는 현실을 과대평가하여 ‘중국패권론’, ‘중국위협

41) 이희옥, “중국의 부상과 미·중 관계의 새로운 변화: 중첩의 확대와 갈등의 일상화.” 『외교안보연구』 제6권 제2호, 2010, p.63. ‘신진보주의’를 자처한 노무현 정권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미 FTA까지 추진하였다. 박후진, 『중립화노선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선인, 2007, p.212.

론'을 말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중국의 부상이 '미국 단극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굴기(崛起)' 경향성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진 못할 것이다.⁴²⁾ 아래 <표 3>에 따르면, 중국의 종합 국력은 서방 7국과 브릭스 4국 총 11국에서 제7위일 뿐이다.

<표 3> 2010년 중국 종합 국력에 대한 분석 및 평가표

종합국력 평가지표		순 위	비 고
구성 요소	영토 및 자연자원	4	—
	인구	1/13.7억 명	—
	경제 (GDP/일인당GDP)	2/8	일인당GDP '서방7국' 앞자리, '브릭스 4 국'이 뒷자리
	군사	2	—
	과학기술	8	—
영향 요소	사회발전	10	지니계수 40 초과 혹은 50 초과
	지속발전가능성	낮은 편	생태과괴율, 녹화(綠化)율, 에너지 효율에 대한 평가
	안전 및 국내정치	8	'서방7국' 앞자리, '브릭스 4 국'이 뒷자리
	국제공헌	8	주로 유엔에 대한 기금을 가리킴

출처 : 중국 사회과학원, 『2010年 國際形勢黃書』 2009. 12. 24.

동북아지역에는 냉전시대의 안보구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방 삼각구도'로 양분된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지만, 미국의 우위, 냉전 잔재, 전통적 동맹 관계 등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 결과, 중미 관계가 동북아 지역구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주류적 관점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동북아 지역구도와 관련한 연구들은 중미 관계를 핵심 변수로 설정하고, 이 거시적 패턴 아래에서 서술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42) 조지프 나이,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Vol.89.; 이상현 편,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지도: 중국 부상의 안보적 함의』, 서울: 세종연구소, 2011, p.12.

동북아 지역구도를 이루고 있는 중·미·일·러 동북아 4강국과 거기에 한반도 남북한을 포함하는 6개국을 모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을 살펴보자.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면에서 급부상하였다. 하지만 2011년, 중국의 GDP 총량은 세계 제2위지만, 1인당 GDP는 세계 제95, 96위였다. 이 때문에 “중국은 강하면서 약하고, 부자면서 가난하다”고⁴³⁾ 평가 받는다. 중국에게는 현재 국내 발전이 더욱 시급한 시기이며,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중국은 대 한반도 정책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이중적인 방식을 취하였으며,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강화하였다. 또 일본과도 영토분쟁이 있지만 양국관계를 ‘전략적 호혜관계’로 발전시켰다. 동시에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에서 6자회담을 주도하였고, 미국과 협조하며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자 미·일, 한·미 동맹체제 유지·강화로 견제하였다. 미국은 1997년 발표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에서 중국을 ‘잠재적 패권 도전국’으로 지목하였다. 2012년 6월21~22일, 한·미·일 3국은 합동해상훈련을 제주 남방 국제수역에서 실시하기도 하였다. 훈련에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도 출동하였다. 이는 모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미국에게 중국은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다.⁴⁴⁾ 미국은 2008년 발생한 자국의 경제 위기 수습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양국의 경제협력은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다. 이제 중미 양국은 상대를 적으로 상정하면서

43) 김홍규, “새로 쓰는 동북아 안보지도와 한국: 중국 부상의 안보적 함의.” 이상현 편,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지도: 중국 부상의 안보적 함의』, 서울: 세종연구소, 2011, p.193.

44) 2011년 현재 중국은 미국의 제3의 수출시장과 제1의 수입국, 미국은 중국의 제2의 수출시장과 제6의 수입국이다. 중국 『인민일보』 2011년 10월 18일.

일방적인 우위를 추구하거나, 상대에 절대적인 불이익을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결국 중미 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띤다. 한편,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를 우려하고 있으며,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 미군 해군기지 이전 등의 문제로, 한국과는 FTA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 주도권 장악을 위한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주장하며, 미국을 포함한 한국, 인도, ASEAN 및 호주 등을 엮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이는 자위대의 국제역할을 확대하는 군사력 강화로 이어졌다. 중·일관계는 닌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미사일방어, ‘미·일 신안보지침’, 역사교과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였지만, 2008년에 ‘전략적 호혜관계’로 전환하였다. 경제면에서 중국과 일본은 서로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국 간 갈등을 수반한 협력 관계는 2010년 중국과 GDP 규모의 역전, 2011년 쓰나미 타격 등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등장 이후, ‘강대국 재건’, ‘아세아 최대의 천연가스 공급국’ 등을 슬로건으로 동북아 및 한반도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며, 전략 중심을 동북아로 조금씩 이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미국의 일방주의,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자 한다.⁴⁵⁾ 러시아는 일본과 쿠릴열도 4개 섬 영토분쟁에 있지만, 일본을 ‘극동·바이칼 사회경제발전 연장프로그램’에 동참시켰다. 한반도전략에서도 남북한과 균형외교를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2011년 8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에 맞춰 러·남·북 천연가스 연결사업, 양국 해군연합훈련 등 문제에 합의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전통적 유대’라는 관점에서 경제를 우위에 둔 실용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2008년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북한을 지나는 가스배관을 통한 천연가스(PNG : Pipe Natural Gas) 도입 외에 우라늄과 석유개발 사업에서도 협력하기로

45) 朴英愛, “중러 대 한반도 정책의 비교분석.” 『김정은 체제 공식출범과 북한의 대외관계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2012년 4월 25일, pp.5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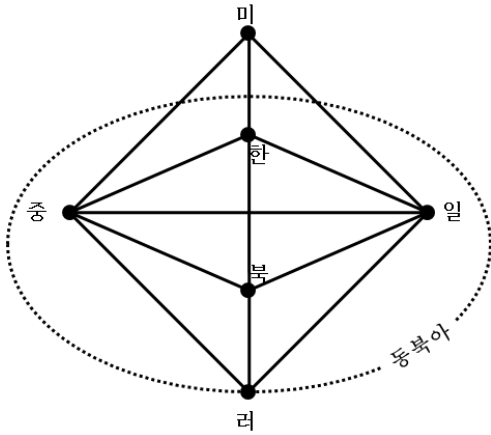
합의하였다.

한국은 북핵문제 등의 해결에서 다자간 대화방식을 선호하지만, 북한은 북·미 직접대화를 원한다. 그 결과 북·미 대화가 진전되면, 남북관계는 악화되곤 하였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 등에서 한·중 관계 발전에 기대어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에 근거한 대북 강경태도를 펼치자, 중국은 상황을 우려했다. 그 결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양국의 인식 차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5.24조치’, 한·미 연합군훈련, 한·미 동맹 강화로 대응하면서 남북 관계를 더욱 경색시켰다.

북한은 2012년 4월, 미사일을 발사하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였다. 북한은 겹쌓인 봉쇄를 무력화시키고자 중국과 관계 유지·강화에 적극 나섰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 김정일 위원장의 1년 사이 3차례 방중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북·중 관계는 강화되었고, 북·중 교역도 더욱 활성화 되었다. 반면에 남북교역은 위축되었고, 한국 사회에는 이른바 ‘통중봉남’문제까지 나왔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의 우려를 자아냈고, 미국은 식량조사단 파견을 통해 북·미 직접대화를 타진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북아지역은 영토 분쟁, 역사 갈등, 냉전 잔재 등 갈등요인이 상존하면서도, 각국의 세력관계가 유동적이고 상호 교차·협력한다. 이것을 <그림 1>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동북아 지역구도 네트워크



<그림 1>은 동북아지역 각국의 상호 연관과 발전을 남북한 관계를 축으로 그려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동북아지역에서 역내 강대국 간 역학 관계는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 한반도에서 불안정 요인이 발생하면 동북아 지역구도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동북아 지역시스템은 협력 국면이면, 시스템에 경계가 없는 듯 통합된 새로운 질서를 창발하고, 대립국면이면 영토문제 등 다양한 경계로 분열되는 구질서로 되돌아간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협력과 대립은 서로 융합되며 대립 속에 협력, 협력 속에 대립이 뒤엉켜진, 경계가 불투명한 혼돈양상을 보여준다. 동북아 지역구도는 필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복잡계’로서 갖춰야 할 특징을 잘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북·중 경협 활성화’는 양국의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성을 지니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 그런데 국제정치 무대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하려는 중국과 국제적 포위망에 빠져 있는 북한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은 동북아 지역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중 경협’이 동북아 지역시스템에 가해지는 섭동요인으로 작용하면,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각기

46) 복잡계의 특징에 대해서는 윤영수·채승병, 위의 책, pp.59~61 참조.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 그 결과 동북아 지역시스템은 각국 지도부의 ‘북·중 경협 활성화’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구성하며 상호작용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북·중 경협 활성화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국가는 한국일 것이다.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남북 경협이 위축될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인식에 입각하면, 한국은 당연히 한·미 동맹의 강화를 추진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미 대결구도-‘남·북방 삼각구도’로 귀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대 한국정부는 동북아 지역구도의 핵심변수를 중·미 관계 변화로 설정하고, 그 틀 속에서 움직여 왔다. 한국정부는 북한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였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 또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기권하거나 동참하였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경협은 활성화되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 중국은 자기와 혈맹관계였던 북한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복잡계 이론에서는 위와 같이 ‘큰 축척(縮尺:scale)’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축척을 작게 하여 미세한 부분까지 살펴본다. 이때 원래의 변수였던 큰 축척 즉, 중·미 관계는 상수로 되며, 시스템 내 상호연관된 각 행위주체들이 변수가 된다. 또한 복잡계 이론에서는 시스템상에서 현재의 소위 ‘미세한 변화’가 역으로 시스템을 ‘혼돈의 가장자리’-임계점으로 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미세한 변화’가 ‘놀라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과한 바로 이 점이 문제 해결의 ‘전략적 지렛대’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중 경협 활성화’가 섭동요인으로 가해지면, 동북아 지역구도 시스템이 요동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스템에 요동이 발생하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뿌리를 둔 ‘되먹임 시스템 원리’를 도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구도 이해에서 대체로 간과했던 문제의식 즉, ‘미세한 변화’가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

는 변수는 ‘어느 국가’일까? 중국은 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까? 왜 북한문제에서 중국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영향력을 상실하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하였을까? 등등의 의문들을 아래의 제3절에서 ‘되먹임 시스템 원리’를 응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되먹임 시스템 원리’로 알아본 북·중 경협 활성화의 파급효과

상식적으로 ‘북·중 경협 활성화’라는 섭동요인이 가해졌을 때 시스템상에서 우려를 표명할 국가는 한국과 미국, 일본일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은 분단체제에 따른 적대감 때문에 더욱 걱정할 것이고, 곧바로 한·미 동맹 강화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냉전적 대결방식의 재생산이며, 시스템 상에서 중미 관계 변화만이 핵심변수라고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더불어 시스템상의 각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은 쉽게 무시될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을 ‘G2’라고 지목한 시점부터 중미 관계 변화는 동북아지역시스템에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고,⁴⁷⁾ 시스템에서 각국간 상호작용을 부각시켰다. 이제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는 식의 단선적 사고방식으로는 복잡적이고 혼돈된 동북아 지역구도-복잡계를 전략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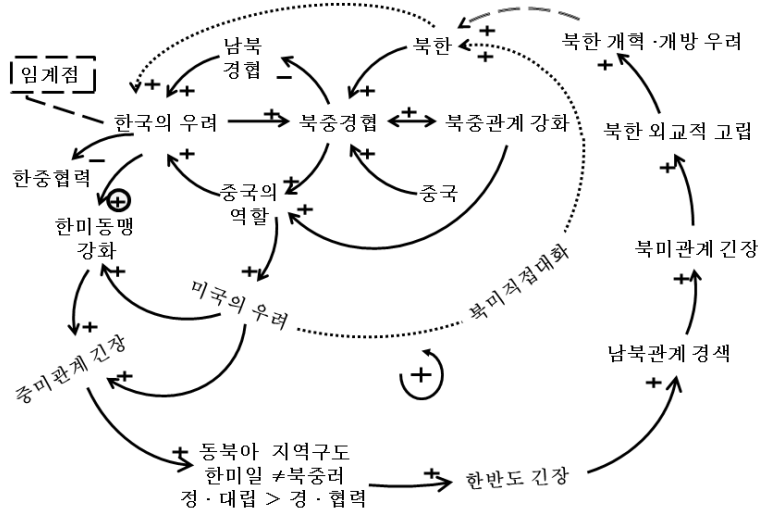
본 연구는 복잡계 이론의 분석도구이자 시스템 사고방식의 핵심인 ‘되먹임 시스템 원리’를 적용하여 ‘미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수를 찾고자 한다. 우선 이 원리의 두 가지 효과에 근거해 각 구성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되먹임 고리’로 모델링하면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어서 지배적 되먹임 고리가 전환하는 임계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47)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전략: 2010년 QDR과 함의,” 『전략연구』 통권 2050호,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2010년 11월; 진중순, “QDR 2010으로 본 미 국방정책 변화와 함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대응,” 『군사세계』 통권 173호, 21세기군사연구소, 2010년 3월.

(1) ‘양 되먹임’ 효과—부정적 측면

‘북·중 경협 활성화’(=섭동요인)을 동북아 지역시스템에 더했을 때, 한국의 우려가 증폭된 부정적 견해(=‘초기조건에의 민감성’)에 따라서 <그림 2>와 같은 ‘양 되먹임 인과지도’를 그려볼 수 있다.

<그림 2> 동북아 지역구도의 양 되먹임 인과지도



<그림 2>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다. 먼저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경우이다. <그림 2>에서 ‘북·중 경협 활성화’라는 섭동요인이 가해졌을 때, 한국의 우려로 인한 부정적 인식은 한미 동맹 강화로 이어진다. 여기에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작용한다. 두 국가는 이 시점에서 한·미 동맹 뿐만 아니라 미·일 동맹 강화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체제의 공고화를 우려하는 중국에 의해 한·중 협력이 영향을 받게 된다.

2009년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후, 한·미 관계의 ‘21세기 전략동맹관계’로의 격상은 안보영역에 제한됐던 동맹관계를 전 방위적 협력을 위한 동맹으로

발전시킨 것이며,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태평양으로까지 확대한 것이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중국 영향력 억제세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미 관계를 더욱 긴장시킬 것이며, 동북아 지역구도는 각국간 경제적 측면에서의 밀접한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영역에서의 대립에 크게 규정 당하며 냉전적 구질서로 회귀할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북·미 사이에도 갈등이 커질 것이다. 이에 따른 외교적 고립의 심화로 북한은 북·중 ‘특수관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는 ‘북·중 경협 활성화’에 양 되먹임 되어, 남북경협을 완전 대체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통중봉남(通中封南)’인 것이다.

두 번째는 북미 직접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는 북미 직접대화이다. 중국 영향력의 증대는 중국 견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을 우려케 할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북·미 관계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 예컨대 2011년 미국이 북한에 ‘식량조사단을 파견’하고, 2012년 ‘2·29 북미 합의’를 추진했던 경우이다. 물론 2012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미 직접대화는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북·중 관계 강화를 지켜만 보고 있을 미국이 아니다. 만약 북미 관계의 갑작스런 개선이 이뤄지면, 역시 한국은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중국도 북한과의 협력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또 다시 양 되먹임 되어 한국의 우려를 증폭시킨다.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상황이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사태 진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차례 방중 후인 2011년 5월말~6월 중순 한국 매체에서 보도한 뉴스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표 4>는 현실적인 양되먹임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표 4> 2011년 5월 말~6월 중순 북·중 경험 관련 기사

북·중 경험 실질적인 진전 → 북·중관계 강화	
(북 1년내 3차례 방중 이어...)	
▶ 북 노동당, “북·중 관계 대 이어 강화”	(6월 6일 보도)
▶ “북 정치국 확대회의 30년 만에 개최”	(6월 7일 보도)
▶ 북·중 황금평 등 경제특구 개발 착공식	(6월 10일 보도)
▶ 北·中 평양서 전략대화	(6월 10일 보도)
▶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음	(6월 11일 보도)
▶ 북·중 관광교류까지... ‘자가용 여행’ 첫 허용	(6월 15일 보도)
남북관계 경색	
▶ 南 ‘김정일 3부자’ 사격표적지 사건	(6월 1일 보도)
▶ 北 ‘남북 비밀접촉’ 폭로	(6월 1일 보도)
한미동맹 강화로	
▶ 로버트 킹 “미국, 북에 식량 위도 쌀은 안 준다”	(6월 4일 보도)
▶ “북한 영변 일대 건물 신축공사 활발” - 미국 압힘	(6월 11일 보도)
▶ 6월 24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 방문	(6월 11일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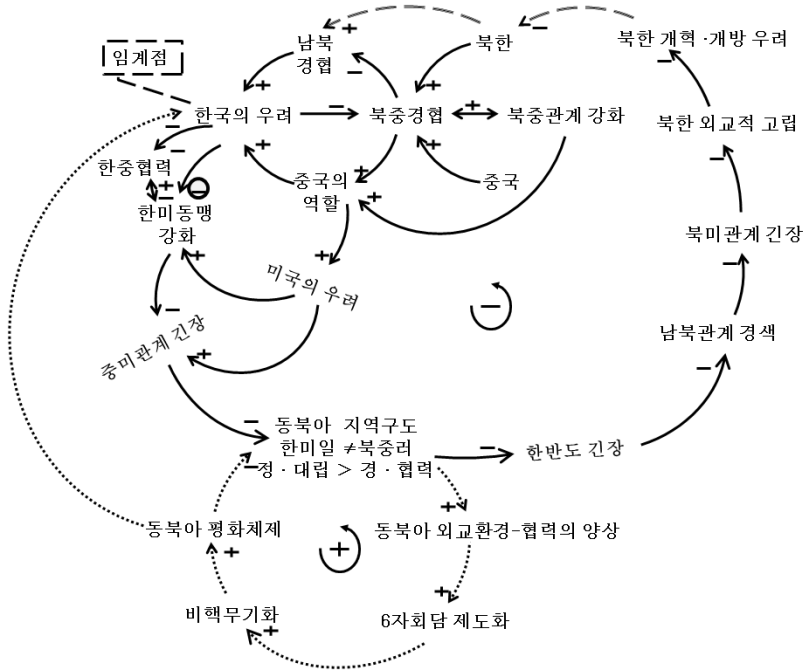
<표 4>를 보면, 한 변수의 변화는 양 되먹임 효과로 인하여 그 변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균형점으로부터 벗어나는 변화가 일단 발생되면 그 변화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⁴⁸⁾ 즉 시스템이 양 되먹임 고리가 지배적일 경우 ‘정상적인 우려’를 벗어난 부정적 인식하의 ‘확대된 우려’는 ‘정상적인 우려’를 더욱 증폭시켜 결국 ‘확대된 우려’도 더욱 증폭시킨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나타내는 ‘양 되먹임 효과’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악순환’이라고 한다. 때문에 의사 결정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이 어떤 되먹임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지 정확히 간파해 내지 못하면 작은 실수로 큰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2) ‘음 되먹임’ 효과—긍정적 측면

48) 김동환, 위의 책, p.150.

시스템에서 음 되먹임 고리가 지배적일 경우, 시스템은 음 되먹임 시스템 원리에 의해 균형 또는 억제·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북·중 경협 활성화'라는 섭동요인이 시스템에 가해졌을 때, 한국의 '초기조건에의 민감성' 즉, 한국의 우려가 감소된 긍정적 견해에 따라서 <그림 3>과 같은 '음 되먹임 인과지도'를 그려볼 수 있다.

<그림 3> 동북아 지역구도의 음 되먹임 인과지도



<그림 3>은 한국의 '정상적인 우려'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인하여, 한·미 동맹이 강화가 아니라 현상 유지 또는 재편으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현실에서도 주한미군 축소와 전시작전권 환수 등이 추진된⁴⁹⁾ 사실이 있다.

49)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28,500명 수준에서 동결한 부시 행정부와 합의의 계승기로 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만약 한국이 한·미 동맹의 현상 유지 또는 재편을 주장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우선 중국의 우려가 사라질 것이다.⁵⁰⁾ 이는 한·중 경협 활성화의 가져올 것이고, 따라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도 심화될 것이다. 2010년 5월, 한·중 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은 중국도 한·중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다.

<그림 3>에 따르면, 한·중 협력의 활용은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여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에 득이 될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2011년 ‘식량조사단 파견’과 2012년 ‘2.29 북·미 합의’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즉, 북·미 직접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재편하고자 하면, 미국의 우려를 증폭시켜 미국을 한국, 중국과 더욱 협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중·미 관계가 긴장보다 협력이 우위에 놓이게 되면, 경제영역의 협력이 정치·안보 영역의 대립보다 우위에 놓이게 되며, 동북아 정세는 평화, 공영의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경색된 남북관계도 풀릴 것이며, 북·중 경협 활성화에 한국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상태도 완화되어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 되먹임 고리’를 타고 한국의 북·중 경협에 대한 우려는 더욱 감소될 것이다. 즉 긴장이 한국에 의해 완화되는 효과이다. 동시에 이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들어줄 것이다. 즉, 북·중 관계의 특징인 “북·중 관계의 구성요소는 또 다른 북·중 관계”를 만들어 가며 “종종 끊임없이 적응해 나간다”는 명제의 반영이

50) 중국은 중·미 관계의 안정기조가 유지되는 현 시점에서는 한·미 동맹관계의 파열도 강화도 아닌 현상유지가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동률, “한·중 정치관계의 쟁점과 과제.”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및 한·중관계에의 함의』, 서울: 오름, 2008, p.261;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외교정책이 미국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희옥, “새로운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 『동아시아 브리프』 통권 22호, 2011, p.101.

다. 그 결과, 한반도 비핵무기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 수행에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음 되먹임 고리’는 증가하는 변수 값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때문에 음 되먹임 고리를 ‘자기 균형’ 혹은 ‘일탈 억제’ 고리라고 하며, 일상생활에서는 ‘선순환’이라고도 한다. 나아가 ‘음 되먹임’ 효과를 통해 ‘지배적 되먹임 고리의 전환점’ 곧, 임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배적 되먹임 고리의 전환점’은 시스템에 언제 개입할 것인가에 관한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을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전략적 지렛대’라고 하는데, 의사 결정자에게는 문제의 해결점이다.

<그림 3>은 ‘북·중 경협 활성화’의 임계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중미 관계가 ‘상수’라면 한국이 ‘변수’로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간과했던 한국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되먹임 고리를 타고 궁극적으로 ‘놀라운 변화’로 동북아 지역구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IV. 결론 : 동북아 지역구도와 한·중 협력에 주는 시사점

‘되먹임 시스템 원리’는 동태적·복합적인 국가, 지역, 사회 등의 시스템을 바라볼 때 매우 유용하다. 현재 북·중 경협 활성화는 동북아 지역시스템의 섭동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구도는 ‘구질서’와 ‘신질서’가 혼재한 혼돈양상으로 복잡계를 이루고 있다. 동북아 지역 내 문제 논의·해결 구도는 양자회담→3자회담→4자회담→6자회담-다자 협력체로 발전하였지만, 그 어느 것도 제도화하지 못했다. 안보영역에서도 아세안지역포럼(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협력대화(NEACD) 등의 조직이 있지

만,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구도에 ‘구질서’가 지배적일 경우 북·중 경협 활성화는 정치·안보 측면의 대립을 부각시킨다. 반면에 ‘신질서’가 지배적일 경우 북·중 경협 활성화는 경제 측면의 협력을 부각시킨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의사 결정자들이 전략적 사고의 판단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찾았다.

첫 번째 시사점은 동북아 지역구도에서 ‘상수’와 ‘변수’의 새로운 설정이다. 이제 더 이상 동북아 지역구도에서 중미 관계를 더 이상 핵심변수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차원에서 자신의 경쟁자로, ‘G2’로 ‘지목’한 만큼 동북아 지역에서 두 국가는 ‘다극체제 속의 양극체제로 혼재’해 있다. 지금까지는 중·미 관계를 핵심변수로 동북아 지역구도를 바라왔다. 그 결과 각국 간 상호작용으로 되먹임 고리가 형성되는 동북아 지역구도-복잡계를 전략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핵심변수만으로 동북아 지역구도가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다른 변수가 구도에 주는 영향은 무시되기 때문에, 중·미 양국 간 관계의 대립요인만 확대시킨다. 이렇게 되면, 21세기 국제관계에서 국력의 새로운 척도인 ‘연결성⁵¹⁾’을 무시하게 된다. ‘연결성’ 논리에 따르면 다른 행위자들과 가장 많은 연결을 갖는 국가가 중심적 행위자가 되고, 글로벌 어젠다 설정에서 주도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를테면 중·미 관계를 상수로 설정했을 경우 변수는 북·중 경협 활성화로 우려를 느끼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한국이 그 주목해야 할 변수이다. <그림 1>처럼 한국은 한·미·일, 한·중·일, 한·미·중의 삼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시스템의 임계점으로서 한국은 ‘남·북·방 삼각구도’-구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미 관계를 상수로 보았을

51) 즉 국가를 포함한 국제관계의 다른 행위자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얼마나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활용하는지가 국력의 바탕이다. Slaughter, Anne-Marie, “America’s Edge: Power in the Networked Century.”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9.; 이상현,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이상현 편, 위의 책, p.110에서 재인용.

때 간과했던 ‘미세한 변화’ 즉,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한·중 협력의 중요성이다. 한국에게 북·중 경험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위협이자 기회이다. ‘지배적 되먹임 고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임계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이 북·중 경험 활성화를 기회라고 생각하면 더욱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되먹임 고리에 의해 한·중 협력은 ‘ $1+1=2$ ’가 아닌 ‘ $1+1>2$ ’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특수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은 고위급 방문외교를 통해 서로 군사교류를 포함한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2008년 양국의 관계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고,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한·중, 한·중·일 회담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이 북·중 경험 활성화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현재 한·중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중국의 동북 3성 개발프로그램에 동참한다면 간접적으로 남북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존 브리그스·데이비드 피트, 김광태·조혁 옮김, 『혼돈의 과학』, 서울: 범양사, 1990.
- 고유환, “김정일의 위기 대응과 생존 전략.” 『현대북한연구』 3권 2호, 서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0.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1945~2000)』, 서울: 중심, 2000.
-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서울: 선인, 2003.
- 김동환, 『시스템 사고-시스템으로 사고하기』, 서울: 선학사, 2004.
- 윤영수·채승병,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이영훈,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제246호, 2006.
- 이동률, “한중 정치관계의 쟁점과 과제.”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및 한중관계에의 함의』, 서울: 오름, 2008.
- 김연철 외,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9.
- 이희욱, “북·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1』,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이희욱, “중국의 부상과 미·중 관계의 새로운 변화: 중첩의 확대와 갈등의 일상화.” 『외교안보연구』 제6권 제2호, 2010.
- 김강일, “북·중 경협이 남북정치·안보관계에 미치는 영향.” 『신 북·중 경협시대의 한국의 대북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집』, 대외정책연구원, 2010.
- 이재호, “북·중 경협이 남북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신 북·중 경협시대의 한국의 대북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집』, 대외정책연구원, 2010.
- 김용현, “선군정치와 미래.”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 서울: 법문사, 2011.
- 정창현, “남북공조 없이 동북아 주도권 확보 어렵다 — 남북정상회담·평화협정 체결, 현안으로 등장할 것.” 『민족 21』 통권 제121호, 2011.
- 이동률, “중국의 대북전략과 북중관계.” 『세계지역연구논총』 29집 3호, 2011.
- 김일한, “북한의 대외경제에 대한 인식과 북중경협.” 『글로벌정치연구』 제4권 1호, 2011.
- 양문수, “북중 경협 확대와 ‘동중봉남’의 미래.” 『황해문화』 가을호, 2011.
- 이상현 편,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지도: 중국 부상의 안보적 함의』, 서울: 세종연구소, 2011.
- 권영경, “신 북중경협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과제.” 『평화학연구』 제13권 1호, 2012.
- 滿海峰, “新時期中朝關係定位與中朝邊境地區經濟合作發展.” 『遼東學院學報(중국)』, 제13권 6기, 2011.
- 李俊江·范碩, “中朝經貿關係發展現狀與前景展望.” 『東北亞論壇(중국)』 통권 제100호,

2012.

「KOTRA 자료」 「통일부 자료」 「KBS뉴스」 「한겨레 뉴스」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 「노컷뉴스」 「中國 新文化報」 「中國 人民日報」 「香港 鳳凰網」

ABSTRACT

Vitalization and Ripple Effec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D.P.R. Korea

Li, Jin-Hui(Yanbian University of China)

The economic cooperation of the South & North Korea has been reducing since 2007, but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is rather showing the aspect of vitalization. It is developing up to the level of 'mutual development, mutual management' like starting construction of the 2010 'Hwanggeumpyung-Wihado Economic Special District' in side of the quality. We would like to analyze and check why China expands-strengthens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even if it causes the tension with other nations, along with focusing toward the ripple effect and implication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of China-North Korea brings to the regional structure of Northeast Asia and cooperation of China-South Korea. This thesis has confirmed that the vitalizations of China-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may apply both as a threat and an opportunity to South Korea after observing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among nations which interact within regional structure of Northeast Asia while having the Complex Systems Theory as theoretical background and analysis framework. We have come into conclusion that cooperation of China-South Korea will bring about the 'synergy effect' which is '1+1>2' instead of '1+1=2' and the strategical thinking from China and South Korea for the peace and growth of the Northeast Asia is absolutely necessary.

Keywords : vital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of China-N. Korea, regional structure of Northeast Asia, cooperation of China-South Korea, Hwanggeumpyung Economic Special District, Complex Systems Theory

투고일: 2012년 11월 09일, 심사일: 201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08일